

지역 대학·인재 경쟁력 강화...전남도, RISE 사업 본격 추진

17개 과제 수행대학 선정...673억원 투입 5대 프로젝트 추진 인재양성·지역과 동반성장 등...82억 규모 추가과제 제공모도

전남도가 사업비 673억원을 투입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수행대학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역대학-지역인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17개 대학을 RISE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전문직업평생교육 허브센터 ▲초연결 공유캠퍼스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젝트 13개 과제를 수행할 1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특성화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또 10개 과제가 실린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프로젝트에 10개 대학이 참여, 전남도 주력·미래산업 분야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문직업평생교육 허브센터 프로젝트에는 지역 평생·직업교육 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8개 과제에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초연결 공유캠퍼스 프로젝트는 대학의 '창업 허브'를 목표로 7개 과제에 6개 대학을 선정했다.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은 대학 주도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10개 대학(11개 과제)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 과제는 10일간 이의신청과 사업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수행 대학은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정된 대학이도, 시군, 연구혁신기관, 산업체와 협력해 전남형 RISE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수요에 맞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미선정 사업과 추가과제를 포함해 82억 규모의 제공모도를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국민 대통합 앞장”...영호남 시·도지사, 지역 현안 대선 공약 반영 촉구

협력회의서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분권·균형발전' 한 목소리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권의 극단 대립 중단과 시·도별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개최됐다.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야 극단 대립 중단 및 국민 대통합,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2차 지방 이전, 비수도권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지역

개발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공동성명서에 담아 대선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 발전과제와 시·도별 현안 등 16건이 건의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공동성명서는 영호남 8개 시·도

가 새 정부를 향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영호남 번영에 날개를 달아줄 두 가지 핵심사업인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과 '달빛내륙철도' 추진에 모두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차기 영·호남 협력회의의 의장으로 선임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지역 8개 시·도지사가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등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1998년 출범한 이후 올해로 28년째 지속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미부터 감동까지”...5월 광주 여행 어때

5·18 사적지 투어·'소년이 온다' 소년의 길 투어 등 상품 출시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기대되는 도시 최애 여행지'로 꼽은 광주시가 5월을 맞아 다양한 5·18 테마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5월에 '민주가 온다'를 주제로 다양한 테마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지난해 외국인 방문자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 광주시는 올해 가장 기대 되는 여행지로 선정됐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노벨문학상 기념 투어' 장소로 떠오른 것과 야구팬들이 'KIA 타이거즈 직관'을 위해 찾는 도시라는 점이 선정 배경이다.

광주는 한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다.

이에 광주시는 1980년 '오월광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5·18사적지 탐방과 도보 투어, 무등산 체험 등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

광주시는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되짚어보고, 오월 그날의 소년이 돼 역사적 현장을 함께 걸어보는 투어 '소년의 길'을 운영한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 투어는 광주의 민주화 역사를 따라 걷는 테마관광상품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정이다.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 전

일빌딩245, 옛 직업자병원, 광주천변, 국립5·18민중묘지, 광주극장, 지역독립서점 등이 투어코스다. 투어 예약 방법과 문의의 연락처는 '광주관광' 홈페이지 광주방문안내-특화관광상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소년의 길' 주요 지점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소년버스'를 운영한다. '광주투어버스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해 원하는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걸음이 지칠 때마다 편리하게 '소년의 길'과 양립동 일대를 둘러볼 것을 권한다.

광주시는 선선한 봄바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오월 텐트촌' 운영부터 무등산의 자연 속에서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 관광상품도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 향쟁지인 금남로 인근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되는 '오월 텐트촌'은 5월17일 밤 운영한다. 2·3인용 텐트 500동(약 1200명 수용) 규모로, 5·18 전야제 심야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에서 광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일원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숙박 관광상품 '지오스테이'도 출시한다. 지오스테이는 무등산 인근 숙박업소에서 머물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은 물론 무등산권역을 중심으로 지질관광, 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오는 5월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5·18 유족, '5·18 편휘·사자명예훼손' 스카이드일리 고소

광주시가 5·18 유족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스카이드일리를 고소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기념재단,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조사천·고(故) 최미애님의 유가족과 함께 스카이드일리의 허경 기자, 조정진 대표, 스카이드일리 인터넷신문사(이하 피고소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국헌 문란 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정당한 시민항쟁으로,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사실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피고소인들은 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은 실탄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민간인을

총으로 쏠 수 있었겠느냐", "조사전은 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최미애도 무장괴란에 의해 사망했다"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에서는 조사전씨와 최미애씨의 사망이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이번 고소를 진행했다.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기반으로 신원 불명의 계엄군과 탈북자 증언 등을 덧붙여 왜곡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는 것이 광주시와 고소인들의 판단이다.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2차 가해로 직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발은 이미 2024년 1월 이루어졌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 결과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사건에 대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같은 왜곡을 막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고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민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5·18기념재단 및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